



뉴스제보: 041)631-8114 / 광고문의: 080-631-8114

2021년 11월 9일 (화) [제62호]

## 대전시장-교육감-언론사 사주 부적절 한 만남 '논란'

### 대전 도안 2단계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 학교 용지 확보 두고…대전시, 말로만 '투명 행정'

대전시장, 대전시 교육감, 지역 언론사 사주가 만나 밀실 행정을 펼쳐 비난을 받고 있다.

이들 3인 밀실 접촉은 지난 달 21일 교육행정협의회 빌미 제공 후 '대전 도안 2단계 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 학교 용지 확보'를 두고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만난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CTN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3인 접촉자 중 해당 언론사 A 씨는 도안 2단계 사업 구역 내 2-3 구역 개발 사업자로 알려졌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시와 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시 교육청 6층 중회의실에서 '2021 대전시 교육행정협의회'를 가졌다.

협의회 참석자는 대전시장, 도시주택국장, 도시개발과장,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비서실장, 행정국장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 앞서 허태정 대전시장과 설동호 교육감, 도안 2-3 구역 사업자인 A씨가 만나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인 회의에 앞서 만났다는 점에서 개발업자 입장이었다면 특혜로 비치는 대목이고 언론사 사주 자격으로 만났다면 압력을 행사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도안 2-3 구역 학교 용지 확보 방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시 교육청 관계자는 '협의 매수'가 아닌 강제 수용을 나설 수 있도록 교육청이 나서 줄 것을 종용 받았다"라고 확인해 줬다.

또, "이 만남으로 오후 2시에 예정된 교육행정협의회가 15분 정도 지체되

진행되기도 했다"고 한다. 협의회 이후 이들은 다시 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교육부에 질의한바 학축법의 결정권은 교육감에 있다는 취지를 제시하며, 강제 매수 방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이에 시 교육청은 교육부 해석이 달라 학축법으로의 추진은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와 시 교육청은 서로의 의견만 표하는 자리였다고 해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 사업자가 주선한 자리에 시장과 교육감이 모여서 혜택을 주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한 모양새가 됐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행정국장은 "이번 만남이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서로의 의견만 냈고, 협의는 이뤄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교육청은 최근 복용초등학교 설립 문제와 관련, 학교시설 촉진법을 통한 잔여 용지 수용 의견을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냈다.

이에 중도위는 강제수용이 아닌 관계법상 행정 절차에 따라 협의 매수에 노력을 충분히 기울인 뒤 불가피한 경우 강제수용 심의를 다시 신청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했다.

또 복용초 용지가 대전시의 도시개발사업법과 대전교육청의 학축법이 중복 적용될 우려가 있어, 도시개발구역 지정 취소 소송 등 결과에 따라 수용 계획을 확정하라는 의견을 시 교육청에 전달했다.

결국 이번 중도위 심의 결과가 복용초등학교 설립 문제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 현재 입주 중인 '도안 아이파크 시티' 학부모와 학생들의 피해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민준 기자

### 충남교육청, 내년 예산안 4조 2,349억원 편성

#### 교육회복 지원, 미래교육 지원, 교육안전망 구축에 중점 투자

충남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022년도 예산안 4조 2,349억 원을 편성해 충남도의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2022년 세입예산안은 정부의 세수 여건 개선으로 교부금 6,393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82억 원 증가 등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 3조 5,548억 원보다 6,801억 원(19.1%)이 증가한 4조 2,349억 원 규모다.

세출예산안 편성 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회복사업, 미래 교육 기반 조성과 내실화 사업, 학생들의 온전한 성장을 지원할 교육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이다.

주요 세출 사업은 ▲교과보충 등 학습지원에 439억 원 ▲과밀학급 해소에 161억 원 ▲직업계고 지원에 468억 원 ▲원격·미래교육 학습환경 구

축 345억 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전환 959억 원 ▲고교학점제 기반 마련 228억 원 ▲학교 방역 지원을 위해 167억 원 ▲유·중등 돌봄지원에 125억 원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3,597억 원이다.

김지철 교육감은 "내년 예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학교 현장의 교육력 회복과 취약계층 복지 지원 등 교육 안전망 구축을 강화했다"며,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을 교육에 접목하는 미래교육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서둘러 구체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2월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한성진 기자

### 경기도교육청, 학교 신설 교육부 중투 통과율 94% 역대 최고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이 교육부에 학교 신설 심사를 의뢰한 16개 학교 가운데 15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통과율로 보면 94%로 역대 최고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28일 열린 교육부 '2021년 정기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설

을 의뢰한 16개 학교 가운데 '적정' 5교, '조건부' 10교로 15개 학교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건부 통과 10개 학교에 학교설립계획 등 원안대로 추진, 미개설 학교 용지 조치계획 제출, 학군 분리계획 재검토 보고 뒤 주진 등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이번 심사에서 과밀학급 해소와 먼 거리 통학으로 인한

학교설립의 절실히 적극 표명해 오랜 숙원이던 매교초와 기흥1중 신설이 조건부 통과되는 결과를 이끌었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유례없는 통과율 94%를 기록하면서 경기도 지역 교육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연도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율 평균은 2020년 38%, 2021년 66%로,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통과율은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도교육청 최복운 학교설립과장은 "경기도는 빈번한 개발사업으로 학생 수가 계속 늘고 있어 전국 최대 학교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는 지역"이라면서 "조건부 통과된 10교는 부대의견 적극 이행 후 적기개교로 학생들 교육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우 기자

### 교원 84%, 학생에게 교장과 교섭권 부여 '부적절'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는 비상식적, 비교육적 법안 즉각 철회해야

초·중·고 학생에게 교장과의 교섭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해 교원 대다수가 반대 했다.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의무화도 대다수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9월 28일~10월 4일, 전국 초·중·고 교원 1442명을 대상으로 강의원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강의원은 지난 8월 △학생회에 교장과의 교섭·협의권 부여 △학생회 법제화 및 학운위의 1/5 이상을 학생으로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주요 설문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회가 학생의 인권·생활·복지 등에 관해 학교장과 '교섭·협의'하고, 교장은 학생의사항 이행에 노력해야 한다는 개정안에 대해 교원 83.5%가 '부적절하다'(부적절 19.8%, 매우 부적절 64.2%)고 응답했다. 평교사도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80.0%에 달했다.

'부적절' 응답 이유에 대해서는 '초·중·고 의무교육 제도 및 기본질서에 반하는 비교육적 내용'(29.4%), '사용자-피고용자의 노사관계법 적용 등 몰법리·몰상식'(29.3%), '학령기(미성년자) 배움을 전제로 한 사제 관계의

파괴'(27.4%)를 주요하게 꼽았다. 학생대표가 학운위원 정수의 5분의 1 이상 참여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적절' 답변이 83.7%(부적절 26.3%, 매우 부적절 57.4%)나 됐다. 그 이유에 대해서 교원들은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신해 학부모가 참여 중'(32.3%), '학생과 관계없는 예결산 등 논의의 참여 타당성 결여'(28.6%), '이미 학운위에 의견 개진권 법령에서 보장'(26.0%)을 들었다.

현행 학운위에 학생대표를 참여시키고, 교원대표가 아닌 '교직원' 대표로 변경한다면 학운위 운영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활성화 기대'(12.8%)보다 '주체별 갈등과 반목 확산 우려'(67.3%)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교총은 "현행 교원노조법이 단위 학교 별 교섭을 인정하지 않고 생의권을 불허하는 이유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있다"며 "그럼에도 되려 학생에게 노동법적 권한을 주겠다는 것은 현행 법 체계를 훼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육기관인 학교를 사업장 취급하고 교장을 사용자, 학생을 피고용자로 설정하는 비교육적 법안"이라며 "학교를 노동장화, 정치장화하고 교육주체 간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는 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금현기자

### INDEX

- ▶ 1면 교육정책
- ▶ 2면 전국종합
- ▶ 3면 기획 [비케이아이엔지(주)]
- ▶ 4면 전국교육청
- ▶ 5면 전국종합
- ▶ 6면 충청교육
- ▶ 7면 충청교육
- ▶ 8면 전국교육
- ▶ 9면 전국종합
- ▶ 10면 오피니언
- ▶ 11면 오피니언
- ▶ 12면 기획

- ▶ 1면
- ▶ 2면
- ▶ 3면
- ▶ 4면
- ▶ 5면
- ▶ 6면
- ▶ 7면
- ▶ 8면
- ▶ 9면
- ▶ 10면
- ▶ 11면
- ▶ 12면

CTN 교육신문

꽃과 바다  
태안

# 태안 가을여행

10월,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힐링 할 수 있는

액티브 태안에 빠져보세요!





